

지방자치론

문 1. 지방의회의 지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|
| ㄱ. 의사결정기관 | ㄴ. 입법기관 |
| ㄷ. 비판·감시기관 | ㄹ. 헌법기관 |

- ① ㄱ, ㄴ
 ② ㄷ, ㄹ
 ③ ㄱ, ㄴ, ㄷ
 ④ ㄱ, ㄴ, ㄷ, ㄹ

문 2.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방식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?

- ① 시·도의 자치사무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감사
 ② 확정된 예산에 대한 시·도지사의 안전행정부장관예의 보고
 ③ 시·도가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
 ④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시·도지사의 직무해태 시 주무부처 장관의 직무 이행명령

문 3. 제3섹터 방식의 지방공기업 설립배경이 아닌 것은?

- ① 공공부문의 자금부족
 ② 민관협력부분의 확대
 ③ 공공영역의 기업화 경향
 ④ 공공성의 강화

문 4. 「지방자치법」상의 기구 중 참여당사자를 기준으로 볼 때 성격이 다른 것은?

-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
 ② 행정협의회
 ③ 지방자치단체조합
 ④ 시·도지사협의체

문 5. 대도시 자치구 폐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“대도시 정부도 다른 지역과 같이 2계층이 되어야 한다.”는 형평의 논리에서 출발했다.
 ② 인위적인 구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수 없다.
 ③ 많은 국가에서 대도시 지방정부는 그 일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위 지방정부를 두지 않고 있다.
 ④ 광역행정을 실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일상적 행정수요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.

문 6.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의회의 관여가 이루어진다.
 ②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를 동시에 가지는 사무이다.
 ③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.
 ④ 예방적 감독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.

문 7.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소송제도의 제도적 보완장치이다.
 ②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제도는 직접발안의 형태가 대부분이다.
 ③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.
 ④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관리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.

문 8. 「지방자치법」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 ③ 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·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 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
문 9.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공서비스는 비경쟁성을 특징으로 한다.
 ② 공공서비스는 많은 경우 배제성을 지니지 않는다.
 ③ 무임승차는 비배제성보다는 비경쟁성과 관련이 있다.
 ④ 순수한 공공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.

문 10.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폐지와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②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③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와 설치는 법률로 정한다.
 ④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문 11.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로 보기 어려운 것은?

-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비중
 ②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
 ③ 전체공무원 대비 지방공무원 비율
 ④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율

문 12. 「지방자치법」상 의결기관에 대한 집행기관의 통제수단이 아닌 것은?

- ① 재의요구권
 ② 서류제출요구권
 ③ 제소권
 ④ 선결처분권

문 13. 「지방자치법」상 사무배분기준에 의한 시·도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시·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
- ② 시·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한 사무
- ③ 국가와 시·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·조정 등의 사무
- ④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·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

문 14. 협력적 정부 간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원인이 아닌 것은?

- ① 비선호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 간 부정적 외부효과가 증가하고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 간 하위목표와 정책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.
- ③ 신중양집권화 경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다.
- ④ 광역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다.

문 15. 세외수입의 특징이 아닌 것은?

- ① 세외수입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.
- ② 세외수입은 응익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.
- ③ 세외수입은 종류가 많고 그 수입근거와 형태도 다양하다.
- ④ 세외수입은 지역별, 연도별로 차이가 크다.

문 16.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, 시, 군, 구이다.
- ③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.
-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문 17. 지방공공재 공급에 대한 티보(Tiebout)의 가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- ① 주민들은 이주할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할 때 규모의 경제효과를 고려한다.
- ②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.
- ③ 상이한 가격(조세)으로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.
- ④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.

문 18.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가 존재한다.
- ③ 기준인건비제는 기존의 총액인건비제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-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여 안전 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문 19.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부담은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② 단체위임사무의 국가 감독은 기관위임사무에 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.
- ③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감독은 합법성 위주의 감독이다.
- ④ 단체위임사무에 따른 배상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이다.

문 20.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정 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대책임을 진다.
- ④ 지방채의 발행, 원금의 상환, 이자의 지급, 증권에 관한 사무 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